

# 행정규제완화와정유산업



禹成根

<호남정유 업무부 업무2과장>

## I. 머리말

시장기구에 의한 경제운영을 기본방침으로 표방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지난 수십년간 정부의 시장개입 역할 및 활동은 각 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시대적 배경에 따라 그 폭과 강도를 달리하면서 증대되어 왔다. 거시경제변수에 입각하여 정부가 계획 및 관리를 담당하는 관행으로 인하여 경제의 많은 부분에 정부의 직접참여 및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와 간섭이 확대되어 왔다. 특히 경제성장이라는 절실한 명제아래 성장정책을 추구하는 개발도상국들에 있어서는 성장과 개발의 원동력의 하나인 소위 기업가적 정부(Entrepreneurial State) 역할은 강조됨에 따라 정부의 시장개입역할은 더욱 큰 폭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더 많은 정부의 개입이 많은 부작용을 낳게됨에 따라 정부의 시장개입 역할의 유효성에 대한 비판과 심각한 반성이 일어나게 되었고 경제문제를 정부간섭 및 규제가 아니라 자유시장메커니즘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여러국가에서 시도되어져 왔다.

우리나라도 최근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침체된 국내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고 제도개혁을 무리없이 추진하기 위한 기본구상으로 「신경제

“  
**우리나라도 최근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침체된 국내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고  
 제도개혁을 무리없이 추진하기 위한 기본구상으로  
 「신경제100일계획」과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

100일계획」과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러한 신경제의 기본구상 기저에는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정부의 지시·통제에 의해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외국의 자본 및 기술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87년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 각계층의 욕구분출과 집단이기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발전의 원동력이 정부의 지시·통제에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창의력 발휘로 대체되어야 하며 이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행정·금융·재정분야의 제도개혁이 필요하고 각 경제주체들의 의식도 민주주의 체제에 맞게 새로와 져야한다는 이념이 깔려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신경제」의 핵심은 정부 행정규제완화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창의력 발휘의 기회를 제공하여 침체되어 있는 경제에 활력소를 불어 넣겠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정부행정규제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행정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를 고찰하여 이것이 정유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뤄보고자

한다.

## II. 행정규제완화의 의미

규제(Regulation)의 일반적 의미를 경제활동의 직접당사자가 아닌 규제기관이 피규제자의 기업활동에 있어서의 선택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 한다면 규제완화(Deregulation)란 그러한 선택에 있어서의 제약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의 개념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바, 규제완화의 목적, 규제대상행위의 성격, 규제완화의 대상, 규제에 대한 피규제자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등 제관점에 따라 각기 따로 정의되어질 수 있다.

규제완화를 그 목적에 따라 분류해보면 기업의 이윤추구활동(Profit Making)에 대한 행정장애요인의 제거를 의미하는 규제완화와 가격경쟁(Price Competition)에 대한 행정장애요인의 제거를 의미하는 규제완화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전자는 공해방지, 유류수급안정, 보건·작업상의 안전기준등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계되는 규제의 완화이고 후자는 독점·카르텔등과 같이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는**  
**다음 세가지 시점에서 정책평가 기준의 대상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다.**  
**첫번째는 효율기준에 의한 판정이다.**  
 ”

### Ⅲ. 규제완화의 필요성 및 경제적효과

#### 1. 규제완화의 필요성

경제활동에 대한 공적규제는 당시의 경제사회의 제사정을 반영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유아산업의 육성, 외부불경제, 자연독점폐해시정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비·생산량·가격등에 관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당시에는 필요했고 효과가 있었던 규제중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여러가지 폐해를 가져오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완화는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관계되는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완화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 바, 가능한 모든 규제완화가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완화를 하여야 할 것이다. 즉,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완화를 하여야 겠지만은 정부의 중대한 정책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한 결정보다는 장기적인 검토와 연구를 통해 미비점을 점차 보완해 나가는 수준으로 조금씩 틈을 내어 이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 2.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규제는 맑은 공기, 맑은 물, 안전한 작업환경,

물가의 안정, 수급의 안정, 소비자보호등과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편익을 제공하여 주지만 기업·정부의 규제관리비용, 경제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가격제도로 인한 소비자잉여감소등의 비경제적 효과도 가져다 줄 수 있다.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는 다음 세가지 관점에서 정책평가 기준의 대상으로 분류되어질 수 있다. 첫번째는 효율기준에 의한 판정이다. 이는 규제완화에 의해서 자원배분상의 개선이 달성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이고, 효율의 개선은 경제전체의 몫을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두번째는 소득분배상의 효과이다. 규제는 소득분배상의 흐름에 확실히 역행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유로운 창의에 의한 경제활동이 국민의 부를 증대시킨다고 하는 일반론적 의미를 염두에 두면 규제가 미치는 역효과가 쉽게 납득이 갈 것이다. 세번째는 제도·공급의 안정성이다.

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쟁상태로 이행함에 따라 현재의 체계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적어지고 치열한 시장싸움에서 적자만이 생존하거나 치열한 싸움끝의 암묵적 동의에 의한 휴식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도의 변화에 따른 비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비용을

“  
**결론적으로 규제의 목적, 규제완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유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이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

거래비용이라 한다.

이러한 거래비용은 과도기적이고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정부의 커다란 정책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이고 치유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버릴 수가 있다. 이 경우 정부의 정책은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검토하여 이것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 IV. 정유산업의 규제완화

##### 1. 정유산업의 위치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이며 이는 국내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어쩔수 없는 명제인 것이다. 특히 산업화와 경제개발 과정에서 에너지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두차례의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정책과제는 필연적으로 형성되었다.

국내 에너지자원의 특징으로서는 자원의 부재와 이것으로 인한 해외의존도 심화로 에너지자원의 수급시장이 다른시장에 비하여 가격·수급이 불안정하며 특히 가격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일반적으로 에너지부문은 정부의 산업 및 시장관리의 필요성이 높게 인식되어 왔으며 실

제로 정유산업시장에 깊숙히 관여하여 왔다. 이것은 정유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데에 어느 정도 걸림돌이 되는지 알수 없으나 정유산업은 그 특성상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국내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국내타산업이 자생력을 완전히 갖추는 시점까지는 정부 정책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 2. 정유산업의 규제완화

규제의 완화가 한 사회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초래하느냐 하는 것은 개별경제의 경우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특, 개별경제의 현상향과 미래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규제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통하여 규제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산출되는 경제적 효과가 더욱 클 경우에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어져야 할 것이다.

즉, 결론적으로 규제의 목적, 규제완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의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